

사회적경제연구회 제5회 워크숍

사회적 경제의 사례 연구

-대구·경북과 원주 사례를 중심으로-

2011. 6. 8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목 차]

〈발표원고〉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 1
-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17

〈참고자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어제, 오늘, 내일 37

4. 행사일정

시간		소요 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4:10	10	◆ 참석자 인사	
14:10	14:50	40	◆ 발제자 발표 (류병윤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사례)	
14:50	15:30	40	◆ 발제자 발표 (최혁진- 원주 사회적경제 사례)	
15:30	15:40	10	◆ 휴 식	
15:40	17:00	80	◆ 종합토론 및 정리	

5. 사회적경제 연구회 내부 참석자(전략과제 진행)

구분	연구자	전담분야 및 소속	비고
원내	원장님	총괄	
	임준홍	실태분석, 선진사례, 대응방안	공동책임
	김양중	이론, 실태분석, 대응방안	공동책임
	송두범	실태분석, 대응방안	
	고승희	선진사례, 대응방안	
	이관률	이론, 실태분석(네트워크, 연대분석)	
	허남혁	실태분석, 대응방안(로컬푸드)	
	여형범	이론, 실태분석	
	문정환	실태분석, 사례분석	
	김종수	이론, 사례분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 사회적경제연구회 외부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전문분야	이메일	전화번호
박영송	충청남도의회		
이은애	씨즈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서정민	지역재단		
박상우	홍성풀무생협		
	목원대학교 교수 경제학		
정세은	충남대 교수 경제학		
류동민	충남대 교수 경제학		
이정만	공주대 교수 행정학		
김혜원	교원대 교수 경제학		
추 욱	충남도 사회적경제계장		
임호범	금강일보		
김민숙	씨즈		
명경화	씨즈		
김지철	충청남도 도의원		
박정현	대전광역시 시의원		
노병갑	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김종문	충청남도 도의원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최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원호	푸드코리아		
홍은영	푸드코리아		
박찬무	즐거운밥상		
윤성웅	연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류철식	다인복지연구소		
이재국	얼굴있는먹거리		
남지현	얼굴있는먹거리		

7. 이후 일정

<표> 연구회 워크숍 전체 일정

구분	일정	논의 내용	전문가 초청 발표자	비고
사회적 경제의 이해	3월 25일	-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김신양(성공회 대학교)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 크 구축
	4월 1일	-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 충남도 현황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
	4월 19일 (화)	- 영국의 사회적 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조우석(소기업발전소)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이사)	〃
	5월 3일 (화)	- 일본의 사회적 경제 - 성미산 마을만들기	강내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조경민(마포희망나눔)	〃
실태 분석	5월 19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여건분석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자문회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 및 실제	6월 8일 (수)	- 원주의 사회적경제 - 대구·경북의 사회적경제	최혁진(원주의료생협) 류병운(대구경북사회적 기업지원센터장)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 크 구축
	7월 7일 (목)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포괄) - 농협, icoop, 한살림, 주거협 동조합(구체적)	하승우(지행 네트워크) 함영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	〃
	7월 21일 (목)	-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 사회적경제와 기금(펀드)	박현숙, 김성훈(한발렛츠)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
	8월 4일 (목)	- 사회적경제와 시민단체(포괄) - 풀뿌리사람들(구체적)		〃
	8월 18일 (목)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CB) -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을 활 용한)지역개발	유정규(지역재단) 김달수(경기도의원, 前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
	9월 8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
	9월 22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정책 제안 1		
	10월 6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정책 제안 1		
	10월 20일 (목)	- 종합정리 및 정책화 방안 제안 - 향후 운영방안 논의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하드(자료 공유)

- www.webhard.co.kr (ID: se1004, 비밀번호: se1004)

[목 차]

〈발표원고〉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 1
-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17

〈참고자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어제, 오늘, 내일 37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류 병 윤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류병윤(대구경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1. 서론

올 들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심포지엄과 세미나, 토론회가 유행이다. 이 유행은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증가 및 사회적일자리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경제의 일 부분인 사회적기업의 증가와 발전만으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규정할 수 없으나, 우리의 현실 여건상 법과 제도, 정책과 재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현실적 존재와 나름의 성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의 현재적 의미를 논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이 발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범위도 정해져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이 인증, 육성되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특성과 경제적, 사회적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의 사회적기업의 특성(사업분야, 사업내용)을 분석해 지역밀착형이란 개념규정에 따른 적합성과 영향력이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한 시금석으로 태어나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착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고용비중과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못지않게 지역밀착형으로 대변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역할과 비중이 있는지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밀착형이란 용어의 개념을 지역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지역의 주체나 지역의 주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기업적 방식이나 사회운동에 의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문제'의 특징을 파악, 분석해 비즈니스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업종 및 아이템의 발굴, 지역자원의 연계와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전통과 정서의 회복 등 지역과 밀착한 사업 기회의 확보가 시급하다.

2. 대구경북지역 현황

1) 일반 행정현황 및 경제지표

대구현황

- 인구·면적('09.12월말 기준)
 - 인구: 2,509천명
 - 면적: 884.07km²
 - 행정구역: 8개 구·군(7구 1군) 143 읍·면·동
- 예산규모('11당초) / 재정자립도 53.5%
 - 광역시 5조 4,242억원 (일반회계: 3조 6,538억원, 특별회계: 1조 7,704억원)
 - 구군 2조 601억원 (일반회계: 2조 86억원, 특별회계: 515억원)
- 주요 경제지표
 -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09): 2,869개/종사자수: 95,272명/생산액: 20조924억원
 - 경제활동인구: 121만 8천명
 - 지역내 총생산('09): 32조 9,170억원(전국의 3.1%)
 - 1인당 지역총생산액('09): 1,346만9천원(전국 평균 2,187만원, 16위)
 - 수출액('09): 51억9,300만불(전국의 1.1%)

경북현황

- 인구·면적('10.06월말 기준)
 - 인구: 2,705천명
 - 면적: 19,029km²(전 국토의 19.1%, 전국 1위)
 - 행정구역: 23개 시·군(10시 13군) 331 읍·면·동
- 예산규모('11당초)
 - 도 5조 4,509억원 (일반회계: 4조 6,625억원, 특별회계: 7,884억원)
 - 시군 9조 9,645억원 (일반회계: 8조 3,351억원, 특별회계: 1조 6,294억원)
- 주요 경제지표
 - 산업구조: 1차 23.1%, 2차 16.1%, 3차 60.8%(09년 취업자 기준)
 - 지역내 총생산('09): 69조 1,854억원(전국의 6.5%, 4위)
 - 1인당 지역총생산액('09): 2,655만원(전국 평균 2,187만원, 4위)
 - 수출액('09): 385억불(전국 10.6%, 5위)

2) 지역사회 취약계층 현황과 경제활동 상황

대구경북지역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와 함께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4.6%에서 2005년 16.9%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북지역의 경우 20.8%에서 23.5%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들은 저소득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의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의 독거노인 비율은 울산이나 부산, 광주보다는 비율이 낮은 반면, 인천이나 대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경북의 독거노인 비율은 다른 도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제주와 경남,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또한 대구와 경북 모두 전체 인구 중 상대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대구의 장애인 수는 113,506명, 경북은 162,818명으로 2003년 71,066명, 98,103에 비해 각각 42,440명과 64,715명이 증가하였다.

<표 1>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등록수(단위:명)

연별	대구	경북
2 0 0 3	71,066	98,103
2 0 0 4	77,899	108,654
2 0 0 5	85,265	119,814
2 0 0 6	93,481	132,381
2 0 0 7	100,082	143,009
2 0 0 8	106,448	151,898
2 0 0 9	113,506	162,818

자료: 대구시청, 대구통계, 경북도청, 경북통계 참조, 김성숙(2010) 재인용

2006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사업체 본사 기준에 의한 서울지역의 장애인근로자는 3만 1천명, 경기지역은 2만 5천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45.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률은 제주(2.68%), 강원(2.59%), 충북(2.27%), 대전(2.23%)지역이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구지역은 1.38%, 경북은 1.60% 수준에 불과하여 대구경북권내 장애인의 고용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지역별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추정(2006)

(단위 : 개, 명, %)

지역별	전 체		장 애 인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전체	2,958,427	9,344,841	64,262	124,432	1.33
서울	622,368	3,482,333	10,759	31,445	0.90
부산	259,831	625,322	5,647	9,211	1.47
대구	187,240	396,226	2,858	5,475	1.38
인천	141,198	383,646	2,735	6,092	1.59
광주	92,302	211,120	1,753	2,948	1.40
대전	78,436	203,959	2,747	4,545	2.23
울산	57,770	220,089	1,010	2,588	1.18
경기	570,521	1,707,423	14,452	24,777	1.45
강원	110,886	196,735	3,732	5,093	2.59
충북	84,960	214,593	3,178	4,876	2.27
충남	120,762	275,319	2,471	4,569	1.66
전북	112,386	244,817	1,945	3,535	1.44
전남	118,326	207,475	1,642	2,905	1.40
경북	183,151	404,795	3,857	6,481	1.60
경남	180,963	504,783	4,257	8,117	1.61
제주	37,327	66,205	1,218	1,775	2.68

주: 1) 고용률=(장애인근로자/상시근로자)*100, 2) 지역은 본사 기준임.
자료: 김성숙(2010)

2010년 현재 대구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1,843세대에 31,09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모자가정이 82%(9,394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자가정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대구 경북지역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현황

연별		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국가보훈법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대구	2005	5,858	15,667	1,977	5,147	3,881	10,520
	2006	5,983	16,135	2,207	5,668	3,776	10,467	-	-
	2007	6,322	16,690	2,304	5,900	4,018	10,790	-	-
	2008	6,968	18,342	2,579	6,643	4,385	11,699	4	-
경북	2005	8,300	22,131	2,475	6,140	5,825	15,991
	2006	9,662	25,519	3,020	7,544	6,640	17,970	2	5
	2007	10,128	27,011	3,319	8,398	6,808	18,611	1	2
	2008	10,783	28,438	3,654	9,222	7,125	19,206	4	10

자료: 대구시청, 대구통계, 경북도청, 경북통계 참조. 김성숙(2010) 재인용

2008년 대구경북지역의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구가 51,142가구의 100,113명이고 경북이 72,408가구에 124,5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지역 전체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경북지역은 4.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수급률은 울산의 1.7%, 서울 및 경기의 1.8%, 인천의 2.4%, 그리고 전국평균 2.9%에 비

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반수급자의 취업현황을 보면 대구의 일반수급자 가운데 실직 및 미취업자는 일반수급자의 8.8%, 경북은 5.7%로 전국 7.8%와 비교해 보면, 대구가 조금 높지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대구 일반수급자의 상시고용 비중은 0.95%로 전국의 0.84%에 비해 높으며, 경북의 일반수급자의 상시고용비중은 0.83%로 전국 수준이다.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 및 미취업자가 차지하는 실업율은 대구의 경우 33%이고 경북은 26.6%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 가운데 1/3, 1/4이 실업상태에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비율이 일반 평균에 비해 높고 고용지위 등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4>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단위: 가구, 명)

시 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전 국	854,205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서 울	115,574	206,133	115,574	193,260	12,873
부 산	78,689	138,890	78,689	131,778	7,112
대 구	51,142	100,113	51,142	94,220	5,893
인 천	38,069	69,786	38,069	66,523	3,263
광 주	29,705	61,339	29,705	58,288	3,051
대 전	23,703	46,635	23,703	43,621	3,014
울 산	10,914	18,741	10,914	17,701	1,040
경 기	120,653	207,821	120,653	197,112	10,709
강 원	37,679	64,679	37,679	61,716	2,963
충 북	31,686	57,400	31,686	52,306	5,094
충 남	41,689	74,105	41,689	69,237	4,868
전 북	61,896	115,093	61,896	109,630	5,463
전 남	65,839	114,922	65,839	109,062	5,860
경 북	72,408	124,538	72,408	117,897	6,641
경 남	62,779	106,597	62,779	100,559	6,038
제 주	11,780	23,147	11,780	21,100	2,047

주: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는 제외한 수치임.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전체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김성숙(2010) 재인용

2) 지역사회 산업경제 현황과 인구이동

대구경북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이 음식업과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단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의 사업체수가 많다. 폐기물및환경복원업, 영상및정보서비스업이나 금융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예술및스포츠서비스업 등에서는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매우 낮다.

특히 자연환경 관련 산업이 중요한 경북지역의 농업, 임업, 어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는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

다. 농업, 임업, 어업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서비스업의 발달이 중요한데, 산업분류상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이나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131개 사업체에 1,514명의 종사자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적 특성이 미약하다(김성숙, 2010).

대구지역 또한 20~30대 청년층의 대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각 대학 병원 인턴 경쟁률 현황 보면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가 정원을 겨우 채웠고, 올해는 92명 모집에 98명이 지원하였다.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모집정원에 미달하거나 겨우 채웠는데 올해의 경우 각각 51명 모집에 49명 지원과 39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하였다.

대구지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수도권 출신자 비율을 살펴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정원 120명(2009년)에 83명(69.2%)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2010년에는 정원 130명 모집에 73명(56.2%)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정원 70명(2009년)에 50명(71.4%)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2010년에는 같은 정원에 61명(87%)이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매일신문, 2011. 2. 25).

지역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흡수할 만한 기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 없는 것도 20~30대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취업 전부터 서울 유학길에 올라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는 대학생과 연봉이 더 높은 대구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향하는 직장인 등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산업과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 지역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보면 대구가 3.1%, 경북 3.3%를 나타냈으나, 2011년 1~2월 들어서는 4%대 물가상승율을 보이고 있어 물가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채산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르는 수입 감소보다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에 의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며,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료비 중 유가에 대한 비중이 높으므로, 유가 변동은 수익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유가 20% 상승 시 생산비는 1.56% 상승하는데 반해 제품가격은 0.08% 상승에 그쳐, 1.15% 정도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게 된다(대경CEO Briefing, 2011. 1. 17).

더욱이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요한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철강 등의 경우 생산비 상승 폭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반면 제품 가격 인상률은 낮아 채산성 악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수출 감소율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물가 등 지역경제상황은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을 고용해 기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3. 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한계

1) 사회적기업 성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서, 구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적경제나 사회적 책임 등의 개념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형태의 비영리조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사업들이 시행되었다. 특히, 2003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당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표적 노동복지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지원을 행하고 있다(김순양, 2010).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문제와 정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주변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거창하지 않은 소중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포함하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형태를 보인다. 나아가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출발은 지역문제를 어떻게 추출하는가에 집중되어 나가고 있다(김성숙, 2010).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주요 활동분야는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문화분야가 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식품분야로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조 8%, 환경 7%, 사회복지 4%, 재활용 2%, 가사·간병 2%이며, 기타가 13%였다.

<표 5>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등의 구체적 활동분야

분야 \ 관할지	경북- 사회적기업	경북-예비 사회적기업	대구- 사회적기업	대구-예비 사회적기업	총합계	
가사	1	-	-	-	1	2
간병	-	-	1	-	1	
교육	1	6	1	4	12	13
교육(체험)	-	-	-	1	1	
돌봄	-	-	-	1	1	13
돌봄(가사)	-	3	-	-	3	
돌봄(가사간병)	-	-	-	2	2	
돌봄(보건)	-	-	-	1	1	
돌봄(보육)	-	1	-	3	4	
돌봄(재활치료)	-	-	-	1	1	

돌봄(치료)	-	-	-	1	1	20
문화	1	3	1	2	7	
문화(공연)	-	2	1	1	4	
문화(여행)	-	-	-	1	1	
문화(체험)	-	7	-	-	7	
문화(체험교육)	-	-	-	1	1	3
보육	1	-	-	-	1	
사회복지	-	2	-	-	2	13
식품	1	5	3	2	11	
식품(로컬푸드)	-	-	-	1	1	
식품(음식)	-	-	-	1	1	2
재활용	2	-	-	-	-	
제조	1	2	2	-	5	7
제조(친환경)	-	-	1	-	1	
제조판매	-	-	1	-	1	
환경	2	-	1	-	3	6
환경(재활용)	-	2	1	-	3	
기타	2	4	2	4	-	12
총합계	12	37	15	27	-	91

주: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김성숙(2010)

고용인원별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수를 보면, 10명이하가 30%이고, 11~15명이하가 35%, 16~20명이하가 21%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20명 이하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표 6> 고용인원수 별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등의 수

인원	경북-사회적기업	경북-예비	대구-사회적기업	대구-예비	총합계
5		2		2	4
7		1			1
8				1	1
10	1	11	2	5	19
11	1	4			5
12		6		1	7
13		1		2	3
14	1				1
15	2	4	1	7	14
16	2	2		2	6
18		1	1	1	3
19				1	1
20	2	3	1	2	8
25			1	1	2
31			1		1
35		1	2		3
40		1		1	2
41			1		1
45				1	1
50			1		1
90			1		1
총합계	9	37	12	27	85

주: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김성숙(2010)

또한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 단체유형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유형은 30개 업체로 33.3%, 비영리법인은 11개 업체로 12.2%, 사단법인은 20개 업체로 22.2%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과 민간단체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이 69개 업체로 75.6%나 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은 5개 업체(5.6%), 사회복지시설은 6개 업체(6.7%)로 사회복지기관이 11개 업체로 12.3%에 불과하였고, 협동조합과 기타가 각각 1개 업체였다. 이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근로시설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비율이 높아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유형(빈도, %)

단체유형	경북- 사회적기업		경북- 예비사회적기 업		대구- 사회적기업		대구- 예비사회적기 업		총합계	
법인내사업단	0	0.0%	1	2.8%	4	26.7%	3	11.1%	8	8.9%
비영리민간단체	1	8.3%	11	30.6%	5	33.3%	13	48.1%	30	33.3%
비영리법인	0	0.0%	8	22.2%	0	0.0%	3	11.1%	11	12.2%
사단법인	2	16.7%	9	25.0%	3	20.0%	6	22.2%	20	22.2%
사회복지법인	2	16.7%	3	8.3%	0	0.0%	0	0.0%	5	5.6%
사회복지시설	1	8.3%	4	11.1%	0	0.0%	1	3.7%	6	6.7%
주식회사	6	50.0%	0	0.0%	2	13.3%	0	0.0%	8	8.9%
협동조합	0	0.0%	0	0.0%	0	0.0%	1	3.7%	1	1.1%
혼합형	0	0.0%	0	0.0%	1	6.7%	0	0.0%	1	1.1%
총합계	12	100.0%	36	100.0%	15	100.0%	27	100.0%	90	100.0%

주: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김성숙(2010)

2) 생활협동조합의 성과

대도시인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인 농산물 판매 관련 생활협동조합(생협)과 직거래 단체가 지난 1990년부터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는 지역 동질 의식이 강하고, 지리상 인접해,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임산물을 대구지역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생협사업이 비교적 용이한 사회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10년말 현재, 대구지역 13개의 생협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1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200여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적경제 범위와 영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표 8> 대구(경북)지역 생협 및 직거래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일	조합원 (회원)	자본금 (출자금)	직원	매장	매출규모
푸른평화	1990. 4	2,000여명	1억9천만원	15	6	40억원
곰내들 (직거래 단체)	2009. 1	600여명	1억원	1	1	1억5천만 원
농부장터 (직거래 단체)	2009. 1	500여명	5천만원	5	1	4억원
땅지기생협	2004. 4	500여명	7천만원	1	1	1억5천만 원
대구생협(아이쿱)	2001. 11	1,128명	9억3천만원	12	1	19억원
참누리생협(아이쿱)	2003. 10	1,330명	9억1천만원	14	1	21억원
행복생협(아이쿱)	2003. 11	1,621명	10억6천만원	22	2	45억원
녹색살림생협	2002. 7	911명	3억1천만원	3	1	21억원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1991.	없음	1억2천만원	5	1	10억원
대구 우리밀	2003. 4	없음	3억원	8	1	12억원
대구경북지역먹거리 연대(직거래 단체)	2006. 2	600명(단 체 12개)	3천만원	20	1	4억원
땅살림 생명살림 (직거래 단체)	2003. 10	없음		5	4	15억원
대구 한살림	1996.	800여명	2억원(가량)	4	1	5억원
안동가톨릭농민회 (직거래 단체)	1990.	120명	억원	15	없음	40억원
총계		10,110명	42억7천만원	130명	22개	239억원

주: 매출은 2010년 연간 규모이며, 일부 항목은 추정치임

자료: 김병혁, 류병윤(2011)의 조사자료

3) 지역밀착형 지표의 활용

사회적기업의 ‘지역밀착성’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지역내 구입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2개의 대구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중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중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사회적기업 14개 중 ‘거의 대부분을 지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이 10개사(71.4%)에 이르고, ‘절반 정도를 지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이 1개사(7.1%)였다.

<표 9>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지역 내 구입정도

지역 내 구입정도	빈도	비율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구입	10	71.4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구입	1	7.1
지역 내 구입은 절반이 안됨	1	7.1
지역 내 구입은 거의 없음	2	14.3
합계	14*	100.0

*주: 설문조사 응답한 기관 22개중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원자재를 구입하는 사회적기업 수
자료: 문순영(2010)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역주민에 대한 상품 판매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15개사 중 9개사(60.0%)에 이르고,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3개사(20.0%)에 달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16개사 중 10개사(62.5%)이며, ‘절반 정도를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2개사(12.5%)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밀착적 성격을 가장 적실하게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역주민 비율’은 ‘근로자를 거의 지역 내에서 고용’하는 기업이 22개사 중 18개사(81.8%)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고용’하는 기업이 3개사(13.6%)에 이르렀다(문순영, 2010).

이는 한겨레경제연구소와 지역재단의 조사 연구결과인 ‘지역 내 소재 대기업 10개소의 고용 근로자 중 지역주민 고용비율’과 비교해 보면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외지인, 지역주민 비정규직’이 50.0%이며, ‘대부분 지역주민, 정규직’이 25.5%, ‘절반정도 지역주민, 정규직’ 25.5%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기업이 가진 지역밀착형의 성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은 환경, 제조, 돌봄, 식품, 문화예술 등 모든 사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노인, 장기 실업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78.0%나 고용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대구지역 23개 사회적기업에서 431명(자체고용 119명 포함)을 고용해, 1년간 약 67억7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경북지역 23개 사회적기업에서는 530명(자체고용 238명 포함)을 고용해, 약 13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살펴본 대구광역시와 경북북도의 지역 총생산 규모와 1인당 지역총생산액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1인당 생산액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근로자 중 5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이러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정책적 제언

최근 원유와 다른 원자재(식료품 포함) 가격의 상승은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과열된 신흥시장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성장이 느려진 선진국 시장의 경우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신흥국에서는 석유와 식료품 가격은 물가 구성 요소의 2/3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매우 느슨해진 통화정책과 함께 신흥시장에서의 매우 강력한 성장은 사회적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선진국들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반면에 신흥시장은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 수요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부르고 있는 반면, 여전히 세계경제는 재정, 환경에서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글로벌 수요패턴의 거대한 바위틈에 끼어 꼼짝을 못하는 형국이다. 시장에서 자생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경영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에 치중된 현재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나 국공유지 임대, 우선구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대책에는 구체적 신청절차와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김준양, 2010).

국세나 지방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또한 법규상의 지원사항들이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행정재량이 과도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의 주력계열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들의 지난 4년간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대 기업의 2010년 9월말 현재 고용 규모는 187,514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의 175,673명에 비교해 6.7%(11,841명)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사업보고서(2007년~2010년)를 분석해 보면 4년간 매출액이 50% 이상 늘었지만 고용 증가율은 9.9%에 그쳤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 가까이 증가했으나, 고용은 1.3% 증가에 그쳤고, SK텔레콤은 고용은 줄고 매출액만 10% 이상 성장했다. LG전자만 고용 증가율(9.4%)이 매출 증가율(3.9%)을 앞질렀다.

특히 '투자 대비 고용 효과'는 더욱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8조4000억원(2007년)의 투자에 이어 21조2000억원(2008년), 15조8000억원(2009년), 28조원(2010년, 잠정치) 등 4년간 83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유발된 고용 규모는 10,000명이 되지 않았다. 특히 2007~2009년 사이에는 오히려 고용이 921명이 줄어들었다. LG전자도 같은 기간 연평균 2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2010년을 뺀 고용 증가

규모는 연평균 30명도 되지 않았다(한겨레신문, 2011. 1. 24).

재벌 대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 효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여건의 악화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3섹터의 규모나 제3섹터 간 거래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한계를 보인다. 또한 민간의 사회적기업 투자 및 지원기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기업 촉진을 위한 환경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0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일본의 경우 ‘신공공(NPO)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더 확산되는, 공공 시설물 및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리를 비영리법인(NPO)에 위탁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례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원과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납골당 등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를 기존 광역시도나 시군 산하 공사,공단 등 공기업에의 위탁경영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법과 조례 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관리 경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김경휘·반정호, 2006. 10,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김성숙, 2010. 11,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김준양, 2010. 8, 사 「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 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문순영, 2010. 11, 「대구경북 사회적기업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이준영·오지선, 2010. 10,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기업」

채종현·최준규, 2010. 6, 「한국 사회적 기업의 운영상 특성과 법·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2011. 5,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지원 5개년 계획」

고용노동부, 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대구경북연구원, 2011. 1. 17, 「대경CEO Briefing」

대구광역시, 2009. 8,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중기계획」

매일신문, 2011. 2. 25 기사

한겨레신문, 2011. 1. 24 기사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b.go.kr>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최 혁 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7대 원칙

1)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조합원) 경제·문화·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창립

2)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음.

3)협동조합의 7대 원칙 (ICA 1995)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신설)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신설)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탄생은 협동조합 7원칙 가운데 여섯 번째 원칙인 ‘협동조합간의 협동’, 일곱 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원주 사회적경제 운동의 역사

■ 지학순 주교·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 ⇒자유권 + 생존권 ⇒ 협동조합운동

■ 협동조합운동 : 지역자립의 경제기반을 만들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목적

■ 주요연보

- 1965년 천주교 원주교구 설립, 지학순 주교 부임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65)
- 대성학원 설립(1954년) 등 사회운동가 장일순(요한)과 만남
- 1969년 진광학원 부설 협동조합 연구소
- 1972년 밝음신흥 설립
- 1972년 남한강 대홍수 발생
- 1973년 서독으로부터 구호자금 총 291만 마르크(약 3억6천만 원) 도입
- ‘원주교구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개발사업 시작
- 단순한 구휼이 아니라 마을단위의 공동체운동과 자립, 협동조합운동을 병행
- 1976년 원주선언. 반독재민주화운동. 원주캠프.

- 1985년 6월 24일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 한살림) 창립
- 1989년 4월 3일 생산자 중심의 호저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 원주생협) 창립
- 1999년 6월 13일 원주 나눔의 집 설립
- 2001년 7월 1일 원주자활후견기관 설립(현 원주지역자활센터)
- 2002년 5월 4일 밝음신협과 한살림, 원주생협 발의로 ‘원주의료생협’ 설립
- 2003년 6월 5일 밝음신협 제안으로 8개 단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 2003년 9월 1일 협의회 신문 ‘원주에 사는 즐거움’ 창간
- 2005년 8월 원주가톨릭농민회 회원단체 가입
- 2006년 6월 일본 S-COOP OSAKA 제안으로 GMO FREE ZONE 운동
- 2006년 11월 ‘지역을 창조하는 협동조합 운동’, 한일 국제협동조합 포럼
- 2006년 12월 상지대 생협 회원단체 가입
- 2007년 3월 참꽃어린이 교육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노인생협 회원단체 가입
- 2007년 10월 원주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 개설
- 2009년 6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개편
- 2010년 7월 29일 갈거리사랑촌, (주)살림농산, 문화생협 회원단체 가입
-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 노나메기, 사회적기업 다자원 회원단체 가입

■ 협동조합운동 대전환의 계기

- 석탄사업의 몰락과 이농 등으로 인한 기존 신흥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의 침체
 - 1980년 신군부 세력에 의한 탄압 → 지역협동조합운동의 리더그룹 해산
- ⇒ 도농 직거래를 기반으로 소비자과 생산자 연대를 조직하는 협동조합 모색

-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심화로 민중 생존권 악화
 - 농업의 몰락 및 환경문제 대두
 - 실업의 가속화 및 도시빈민 증가
 - 협동조합 간의 협동 필요성 대두(기존 협동조합 간 경쟁이나 마찰의 폐해)
- ⇒ 협동조합의 공동대응 필요성 대두로 인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 국가 차원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확산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 대두
-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실업빈곤문제, 고령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도전을 창조할 필요성이 생겨남.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확대·개편

3.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배경

1)배경 - 대안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회

최근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으며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열정 또한 많이 쇠락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초기 운동가들의 연로와 후진양성의 미흡, 신자유주의와 제1금융권의 팽창, 정부개입의 증가, 조합원 활동의 위축, 새로운 협동조합 정책 및 이론 생산의 미흡 등 운동과 경영 양측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지역의 협동조합들은 아직까지 변변한 논의 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각개 약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운동 자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오히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운동이 펼쳐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장위주의 현실 시장경제가 세계도처에서 빈부격차의 확대, 생태계의 극심한 파괴, 실업의 증가 등의 모순을 보이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원주지역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확산, 영세 상인들의 몰락 그리고 농업이 급속히 몰락하면서 원주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주민복지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 협의회와 산하 협동조직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대안사회의 실현입니다. 대안사회는 더 이상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야할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자본에 대항하여 주민참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그린비즈니스를 확대하여 생명의 도시에 걸맞은 산업시스템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경제의 이윤은 지역복지의 개선을 위해 환원되어 진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3년 6월 5일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취지문)

2)10대 사업 과제 (2003년 설정한 과제)

- ① 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활성화
- ② 조합원 참여의 확대
- ③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 ④ 지역대학과의 교류증진
- ⑤ 협동사회연구소 설립
- ⑥ 신규 협동조직의 설립지원
- ⑦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 ⑧ 녹색도시의 기반마련
- ⑨ 교육과 문화 활동의 기회 확대
- ⑩ 참여와 자치의 지역사회건설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가 설립되던 시절의 문제의식을 담은 10대 사업과제로서 현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조직비전이 확장된 시점에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3월 19일 지역 심포지움이 그 계기가 될 것임.

3)진행한 주요 사업

■네트워크 강화활동

- 정례회의 개최(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 임원연수회 개최
- 체육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원주에 사는 즐거움’ 발행 : 지역의 독립매체 및 사회경제 활성화 정보 매체

■국제교류 활동

- 한일 협동조합 간 교류 : 일본 오사카 S-COOP 및 오사카 키타리생협연합회 교류, 일본 생활클럽생협 연합회와 교류
- GMO FREE ZONE 운동 시작
- 기술연수 : 일본생협 산하 소시지공장 및 술공장에 기술연수생 파견
- 미국 WAP 사업연수단 참여 (텔라웨어 대학교)
- 캐나다 퀘벡지역 사회적경제 연수단 참여
- 2010년 6월 : 이탈리아 볼로냐 및 트렌토지역 협동조합 탐방

■ 농업살림, 생명살림운동 추진

- 학교급식조례, 친환경농업지원육성조례, 원주로컬푸드조례, 원주로컬푸드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 친환경급식 단계별 추진 합의(2008년 원주시와 협약, 현재 진행중)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개소(2008년 - 친환경쌀 공급사업, 로컬푸드 식당 운영, 결식아동친환경급식)

- 친환경 농가공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 원주로컬푸드 운동 :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교육, 환경, 사회복지 운동 ⇒ 전국 최초로 2009년 12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식량체계 구축, 원주푸드 종합처리센터 추진 : 원주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 원주푸드 종합처리센터 추진 : 원주 푸드는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주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 지역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활동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진행 (2008년부터 매년 실시)
- 신규 사회적기업 설립 및 경영지원 (수시)
-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축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의 확대·발전(2009년 6월)
- 2011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 사회적경제 불목화를 위한 지역 심포지움 개최 (미래비전 및 의제 설정, 전체 사회적경제 단체들 협약체결)

⇒사회경제 영역 확대 발전을 통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건설

⇒지역사회의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생산, 소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

4. 회원단체 현황

1) 전체 현황

17개 단체 3만 800명의 조합원 (중복 조합원 포함 원주인구의 10%)

→ 2011년 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가입을 완료하면 20여개 단체로 확대 될 예정

2)유형(정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체 운동기관 등)

■ 신용협동조합 - 밝음신협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원주의료생협(사회적기업), 상지대 생협, 노인생협(사회적기업), 문화생협, 삼도생협, 소꿉마당, 참꽃어린이교육생협

■ 공동체 운동기관 - 성공회 원주나눔의집(공동체 기금), 갈거리사랑촌(갈거리협동조합), 원주지역자활센터(누리협동조합)

■ 기타 단체 - 가톨릭농민회, (주)살림농산

■ 협력 단체 -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 기타 회원 사회적기업 - 유한회사 다자원, 사회적기업 햇살나눔

■ 신규가입 준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행복한시루봉, 친환경급식 맞두레

조직명	창립연도	주요활동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1972년	조합원 약 1만6천700명, 자산 830억(2009년 12월31일 현재), 자본금 47억 원, 지역사회 공헌 사업 및 서민경제 버팀목
원주생활협동조합	1989년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하는 생활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통한 생활공동체 지향. 조합원 생산자조합원 200명, 소비자조합원 1천200명(2009년말), 총사업규모(2009년) 21억7천여만원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1985년	조합원 5천400여명(2009년 말). 공급액 32억2천500여만원(2009년 말),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과 함께 지역살림을 위해 노력
남한강 삼도생활협동조합	2003년	조합원수 130명(2009년 12월). 삼도(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접경지역인 부른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명농산물 직거래 활동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2002년	조합원수 1천680명(2009년 말), 매출 12억1천여만원(2009년 말), 출자 7단계(2004년 말). 의료의 본질적 가치인 건강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1999년	후원회원 200명(2009년 말).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원주자활센터	2001년	64명의 자활근로사업단, 10명의 자활공동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고용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1999년	25가구(2009년 12월). 학부모인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 터전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교육자치 공간. 보육과 교육
원주가능영농조합법인	1976년	가톨릭농민회강원지구연합회로 출범. 출자회원 88명, 조합원 250명(2009년 12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1천100여명(2009년 12월),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와 노인 일자리 창출위한 사업 전개, 깨끗한 학교 만들기, 택배사업, 소독방역사업, 식당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음
상지대학교생활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3천200여명, 학생, 교직원, 교수를 조합원으로 해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의 공급과 구매 사업, 조합원의 조합 사업에 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사업과 조합원 및 일반 대학인에 대한 홍보사업 등을 펼침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13가구, 대안교육기관 -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생명을 일깨우며 살아가기 위한 환경 및 양육·교육 내용을 공유·창출하는 활동
문화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7년	조합원 350명,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 '생활이 문화, 문화가 생활' 사업 추진 및 미품(美品)을 통한 매장 추진
갈거리사랑촌	1991년	91년 갈거리사랑촌 개원, 97년 12월 십시일반 개원, 98년 원주노숙인센터 건립, 2004년 9월 갈거리협동조합 창립, 지역 복지사회 구현
(주)살림농산	2008년	87년 원주 한살림 참·들기를 공장 축성, 2008년 6월 원주 한살림에서 (주)살림농산으로 법인 분리

5.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조직

- 총회 : 단체 3인(대표자, 실무자, 추천1인) + 각 위원회 위원장 + 사무국
- 이사회 : 각 단체 대표자로 구성
- 집행위원회 : 각 단체 실무책임자 + 사무국장으로 구성
- 위원회 : 정책위원회, 지역농업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원사즐편집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 설립 검토 중
- 사무국 : 사무국장

6.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1년 주요사업

- 사단법인 설립 - 네트워크의 사단법인화
- 회원단체 확대 - 친환경경급식맛두레, 햇살나눔, 기타 육성지역 사회적경제 단체들까지 가입확대 예정
- 부문별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위원회 및 교육복지위원회 등
- 교육사업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및 인문학 강좌, 실무교양 강좌
- 협동기금 설치 및 운영
 - 신규 협동조합 및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 한살림 5% 협동기금 적립 제도화, (주)살림농산 매년 1천만원 기부
 - 위원회 설치 : 운영정관, 재원충당 방안 등 마련
 -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
- 원주에 사는 즐거움 안정적 발행

■원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년 제정)에 근거한 원주지역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업무위탁

- 사회적경제 포털 사이트(2010년 구축) 강화

-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축제 준비

- 청년사회적기업 양성기관 추진 (공모위탁 확정)

- 권역별 지원기관 및 청년사회적기업 양성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전략모델사업 추진 (농식품 가공, 다문화 레스토랑 등)

- 사회적 경제지표 조사 정례화 (매년 정례보고서 제출예정)

■새로운 지역 모델 비전 찾기(이탈리아 트렌토 지역 모델)

■활동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

- 생협법 부분개정운동 (비조합원 이용금지조항 철폐, 비영리법인 단서조항 삭제 철폐, 임직원 겸직금지조항 철폐 등)

-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연대협동조합법 제정운동

- 지방정부 내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원주푸드 육성 → 지역식량 체계 구축 및 원주푸드 종합처리센터 설립 등

7.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비전

■ 사회적 협동조합

- 기아 및 식량 문제 대응,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 상업적 성공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보전자 역할로서의 임무 확대

■ 민주주의와 연대성의 사회건설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전략 강화 (상호출자, 상호이용, 공동 프로젝트, 인적물적자원 공유, 상시적 경영지원체계 구성, 연대금융조성 등)
-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체계 확립
-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참가형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운동의 기본원칙 준수

- 1) 이윤보다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운영 2)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3) 민주적 경영(1인 1표) 4)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 5) 참여의 원칙과 사회적공공성의 강화

8. 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 원주지역 사회적경제 불목화를 위한 성장지원사업 추진 중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원주지역 사회경제 조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조합원 및 회원연계 등을 통한 상호부조시스템 개발 중
 - 물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회경제장터(소평물) 구축
 - 협동카드(가칭) 등을 통한 조합원 및 회원, 임직원의 물품 및 서비스 이용 독려 시스템 (현재 연구사업 진행 중)

■ 생협법 개정에 따른 원주지역 생협단체 대응방향

- 2010년 10월 20일 생협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 2010년 12월 9일 네트워크 3차 집행위 - 6개 생협단체 간 조율하기로 합의
- 2010년 12월 28일 : 6개 생협단체 실무책임자 회의

△협동기금 적립 : 각 단체 총회 안건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업무협약 : 생협법 제46조(사업의 이용)과 관련해 6개 생협단체가 상호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로 함.

△협동의 집 건립과 현금 유동성 공유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함.

△생협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시 사회적경제 조직 서비스와 생산물 우선구매 조항 넣기로 함.

△생협법 제45조(사업의 종류)와 관련해 다중 조합원 이용 매장 건립과 공산품 취급의 원칙을 합의해 나가기로 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어제, 오늘, 내일

최혁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 서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힘없는 다수의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위기를 넘기고 또 성장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희생되었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한 카드남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비정규직으로 내몰아서 가파스로 거대기업들을 살리고 시장기능을 유지시켜낸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부양책으로 감세와 고환율정책을 선택하여 거대기업들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한국사회에서 소시민들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제 살 깎아내기 식으로 그것도 이 사회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밑바닥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며 겨우겨우 위기를 봉합해왔던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으로 전 세계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한국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우리 사회가 어떤 근원적인 변혁이 없이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소위 임계점, 대전환의 시점(Turning point)에 아주 가까이 도달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유는 또다시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희생시킬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곤층이 800만에 도달하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비자발적 비정규직이고 대형 유통자본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 아마도 여기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강제된다면 한국사회는 걸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타인의 희생 위에 존립하던 낡은 방식의 자본주의’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갈수록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는 반복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단기처방의 임기응변으로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이상 희생시킬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러한 자기 파괴적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미 세계는 새로운 가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들이 보수나 진보 양진영 모두에서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 조직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온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 등 소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공적지원에 의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에 대한 모색이라는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의 강력한 힘과 자본집중화, 그에 따른 거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사업확장은 커뮤니티 차원의 작은 경제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빈곤의 확산, 공적 시스템의 약화, 지역공동체의 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우만 놓고 보면 분명 우리사회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공적지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민간의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을 충분하게 축적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도 그 뿌리에는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자발적인 협동의 힘과 민주적인 소통으로 해결해온 보편적인 경험과 전통이 부재하다. 오직 경쟁과 효율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해왔던 사회에서 영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을 그리고 지배와 명령이 아닌 민주적 소통을 우선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대중에 대한 일종의 변형된 폭력으로 느껴지곤 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원주는 참으로 소중한 공간이다. 원주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선배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해왔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과 지학순 주교님 그리고 함께 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힘입어 오늘 원주는 낡은 것이 지나간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하여 감히 꿈꿀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글은 그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축적되어온 역사적 과정들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의 경험들이 공유되는 것은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이후 시민력(市民力)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운동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배들이 물려준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그 해법에 대해서도 이글의 하반부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원주가 배우고자 했던 다른 나라의 경험들도 이글에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필경 원주의 협동조합운동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항상 배우고 재해석한 가운데 창조되어 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몇몇 지역의 경험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소개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낡은 것은 허물어져가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것은 도래하지 않았다. 타인의 희생에 기반하여 성장해온 경제시스템은 이제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 밤사이 쌓인 눈 위로 첫발자국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신새벽에 눈길을 따라 첫걸음 내걸는 사람들에게 원주의 경험들은 분명 참고할 만한 소중한 좌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배경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은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에 힘입어 시작되었다. 1965년 지학순 주교님이 가톨릭 원주교구 초대교구장으로 부임하였다. 지학순 주교님은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가 열리던 시절 유학생으로 로마에 머물면서 공의회 정신으로 온몸으로 체득하신 분이였다. 원주교구장으로 부임하자 곧바로 공의회 정신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척박하기만 하였던 강원도 원주 일원에서 주교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갈 만큼 인품과 역량을 고루 갖춘 주민지도자를 찾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 수소문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추천하였고 지학순 주교님도 장일순 선생님의 인품에 반하여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한다. 이 무렵 장일순 선생님은 사회대중당이란

진보정당 후보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였던 이력과 또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던 탓에 수년간 옥고를 치르고 계속되는 정부기관의 감시 하에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보호막 아래에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보자는 지학순 주교님의 제안은 장 선생님에게는 가뭇의 단비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두 분의 만남은 곧바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1967년 지 주교님이 설립한 진광학교 내에 협동교육연구원이 설립되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협동조합교육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는 일에 집중하였는데 당시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절박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은행문턱으로 인하여 사채와 고리채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내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원주교구 내 영월, 정선, 태백 등지의 광산지역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만성적인 체불임금과 일상화된 노동착취구조로 인하여 광산노동자들의 경제사정은 매우 열악하였다. 게다가 인생막장이란 체념의식으로 인하여 술과 노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고 미래를 위해 현실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들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선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초기부터 협동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경제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교육운동을 병행한 것은 이후 원주 협동조합운동이 대단히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운동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돈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철학에 따른 것이었다. 교통편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탄광지역의 광부들까지 매주 원주로 와서 협동운동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 리더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농촌에서 광산촌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협동조합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시절이라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어렵게 만들어진 최초의 신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학순 주교님의 후원과 장일순 선생님의 지도 하에 설립된 신탁에서 총무를 맡은 사람이 출자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았지만 장일순 선생님이 사재를 털어 갚아주어 주민들은 지도부를 신뢰하게 되었고 다시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새삼 협동조합운동에 있어 초창기에 헌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례이다.

1972년 발생한 남한강 대홍수는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에 대단히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엄청난 수해로 강원남부 지역의 농산어촌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학순 주교님은 독일의 원조기금을 확보하여 천주교 원주교구 산하에 재해대책 사업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 때 만들어진 재해대책 사업위원회는 이후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로 그 비전과 미션을 확대하게 되는데 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재건 및 지역사회개발운동을 펼쳐나갔다.

사회개발위원회의 지역사회운동에는 전국 각지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지닌 수많은 청년그룹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참여로 70년대 원주는 협동조합운동의 도시이자 동시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성지로서도 부각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본래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적 가치와 실천은 반드시 사회혁신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원주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어찌보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탄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협동운동의 지도부에 있던 분들이 많은 곤경을 겪기도 했지만 대중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에 기반한 원주의 협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강원남부 지역에는 한 때 무려 68개의 신탁과 181개의 협동공동체가 건립되어 운영되는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의 공적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한 신(新)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생각처럼 일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원주지역에서 1970년대 사회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주민의 협동공동체 조직을 건설했던 과정과 경험들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시련과 한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장해오던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산업체제가 변모하면서 석탄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떠나면서 광산지역의 협동공동체 운동도 급속도로 쇠락하게 된 것이다. 농촌 지역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국가차원에서 수출 위주로 대도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강하게 펼쳐나가면서 농촌지역 인구도 급속하게 줄게 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7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원주의 협동운동 지도자들을 다시 강하게 억압하려 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도시로 떠나자 협동공동체도 점차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원주의 협동운동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였다. 연수단을 파견하여 일본생협들의 모습을 시찰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원주의 협동운동은 대도시 소비자와 현재 몰락해가고 있는 농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도시소비자와 농민이 서로 협동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상호 간의 생활과 생명을 보장하는 새로운 협동운동, 바로 한살림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한살림운동의 시작은 원주의 협동운동이 전국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편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데에는 원주지역이 가진 소비시장 만으로는 농업공동체들과 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자리하고 있었다. 한살림운동을 계기로 원주의 협동운동은 점차적으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게 되는데 반면 원주지역 차원에서는 운동의 지도자들이 원주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기존의 협동조직들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차원 이상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와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 돌아가신 뒤로는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라는 큰 그림에 기초한 협동운동의 모습은 점차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97년 구제금융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충격은 새로운 협동운동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성찰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었다. 당장에 신탁조직들이 소상공인들의 급속한 몰락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손실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경영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지역의 일부 신탁들은 문을 닫거나 인근 신탁과 통폐합되었다. 주민들이 겪게 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높은 금리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빛은 산더미처럼 늘어났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 앞에서 협동조합들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시대는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글로벌 자본주의 광풍이 원주라는 작은 지역에도 몰아치기 시작하였고 실업과 빈곤문제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어 도저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역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지역의 작은 경제들은 지켜내지 못하면 협동조합운동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환경은 개별 협동조합의 대응체계 만으로는 맞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거대하게 집중화된 자본에 맞서려면 우리도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했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3.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창립

오랜 논의 끝에 2003년 드디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 출범하였다. 모두 8개 협동조직들이 참여하였는데 전통적인 협동조합부터 의료생협처럼 새로운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이나 실업빈곤운동 조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거창하게 시작하였지만 막상 협의회가 출범하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각 조직의 사업과 운영체계,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지난 수년간 친분관계 이상의 교류를 진행해본 적이 없어 소위 협동조직간 협동의 필요조차 느끼고 있지 못한 수준이었다.

간혹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협의회는 대표자 회의와 실무책임자 회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구성원들 간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비용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국제교류연수활동이 중단될 위기도 있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던 분들이 개인적 후원까지 해주신 덕에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고 현재는 각 조직의 핵심사업이 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여년 동안의 국제교류연수활동은 지역사회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 분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각 단체의 조합원 간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공동신문 <원주에 사는 즐거움>를 발행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일부 단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몇몇 활동가들이 사비를 들여 수년간 발행하기도 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이 발행되자 서서히 그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서로 다른 조직의 조합원들이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업홍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매월 1회 발행되는 공동신문 <원주에 사는 즐거움>은 현재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원주협동조합운동의 공식 기관지가 되었다.

협의회가 창립하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자 조금씩 단체 간의 협동사업들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몇몇 단체들이 협력하여 가공사업을 추진해본다거나 복지사업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협동조직간의 협동이 보다 확산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들이 만들어 질 것이란 자신감을 얻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사회에도 사회적기업을 합법화하는 제도가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고 이는 원주지역 협동운동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부여해 주었다. 성공회 나눔의집과 원주의료생협이 우선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자는 분위기를 주도해나갔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동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회

원단체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활동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로 공공급식을 전환하자는 학교급식조례운동,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으며 화상경마장의 지역설치를 막아냈다. 유전자조작에 반대하고 안전한 농업을 확산하자는 시민적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게 되어 지역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운동에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찌보면 이러한 활동은 협동조합의 경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자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보다 민주적이며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협동조합의 성장에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되는 문제이다.

4.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의 전환

2009년에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조직의 명칭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전환하였다. 지역 내에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제도상의 협동조합들만 참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라는 차원을 보다 넓게 수용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법이 시행되고 난 후 원주지역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제 회원단체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제휴되어 있다.

얼마 전 ‘(주) 친환경급식 맞두레’ 라는 명칭으로 법인 창립을 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학교급식 조례운동을 성공시킨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단체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사회적기업이다. 법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주식회사라는 상법상의 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자들과 각 협동조합 단체들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전형적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성공회 나눔의집에서 인큐베이팅한 사회적기업 ‘(유) 햇살나눔’ 도 노동자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원주한살림생협의 협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직 간 협동의 확대되면서 그 사이에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보다 포괄적인 그릇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참가하는 조직도 17개 단체로 늘어났으며 각 단체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대략 3만 1천 세대 정도로 파악된다. 그리고 새로 가입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어 올 연말이면 모두 20개 단체 정도가 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사업의 영역도 확장되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고민들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비전과 가치의 재정립이라는 현실적 욕구도 자리하게 되었다.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들, 가치들 그리고 원칙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조직역량과 경영능력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연수의 활동도 보다 확대하였다. 그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동의 경험들을 배워왔다면 현재는 유럽이나 북미지역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 네트워크의 청년그룹들이 주축이 되어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을 주제별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를 하나로 모아 지난 3월 19일 지역차원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무려 2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각 주제별 의제토론을 거쳐 원주지역의 22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부조협약을 체결하였다. 비전과 가치를 공감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실천전략까지도 서로 협력하여 수립한 것이니 원주협동운동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고 감히 말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긍정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성찰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켜 내는 것이 지금 원주의 협동운동에 주어진 과제이다. 청년그룹들은 이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원주협동운동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시대가 부여한 새로운 과제에 대하여 기꺼이 새로운 도전으로 응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Ⅲ. 결론 -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일부에서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원주만의 특수한 것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만일 원주만의 특수한 사례라면 한국사회의 타 지역에서는 좀처럼 시도되기 어려운 특별한 사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그 초창기부터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정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은 1960년대 말부터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의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부에서는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성장해왔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하며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 글의 목적의 하나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은 아래에서 비교군으로 거론한 지역들과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연관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난 모습으로 이들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들과 비교해서 원주의 협동운동을 바라보는 것은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몬드라곤, 트렌토, 퀘백 그리고 원주

원주 사회적경제 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의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캐나다 퀘백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운동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된 해당 지역들이 원주의 협동조합운동과 매우 유사한 전통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지역들은 모두 가톨릭 사회운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창시자는 돈 호세마리아 신부이다. 그는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인간들이 비인간적인 처우와 일상적인 착취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구상하였다. OECD가 주목하고 있는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운동도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가톨릭 사제였던 돈 로렌조 신부에 의하여 지도되었다. 캐나다 퀘백의 협동조합운동도 그 뿌리는 가톨릭 사회운동에 있다. 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톨릭 사제들이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공제조직과 안티고니쉬 운동에 기초한 신용협동조합 조직을 만들어 낸 것이 오늘날 퀘백 협동조합운동의 뿌리가 된 것이다. 원주의 경우도 천주교 원주교구에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가톨릭 사회운동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확산시켜왔다는 점에서 이와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위 네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모두 특정한 개별 협동조합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협동조합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 즉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경우 최초에는 난로를 생산하는 작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바스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수백개의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들의 연맹체로 발전하였다. 트렌토의

경우도 농업분야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소비, 유통, 가공, 생산,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로 발전하여 지역 차원의 연맹체로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 퀘백의 경우도 신용협동조합들이 성장하면서 타 협동조직들을 위한 투자기금 등을 조성하여 지원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그물망이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방정부까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원주지역의 경우도 초기부터 단일 협동조합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강원 남부지역 전역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상호간 협력체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어왔다.

세 번째로 네 지역 모두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정치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이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에 위치하여 근세기 지속적인 정치적 탄압을 겪어왔으며 그로 인해 아주 빈곤한 지역으로서 지역자원은 빈약하였다. 트렌토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 빈곤문제가 심각하였고 파시즘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던 역사가 있다. 퀘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탄압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미국의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원주 역시 군부독재 시절에 지속적인 정치적 탄압으로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단 겉으로 드러난 외용만을 살펴보면 원주와 나머지 세 지역은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게 된다. 1956년 시작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운동은 현재 270개 협동조합의 연맹체가 되었고 연간 매출액만 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화물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EU에서 벤츠에 버금가는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다. 트렌토 연맹의 경우도 인구 50만 지역에 협동조합 수만 540개에 이르고 매출규모는 3조 6천억원이라고 한다. 협동조합들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섰다. 게다가 협동조합들은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서 가장 좋은 노동조건과 임금, 복지제도를 실현하였다. 퀘백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낸 사회연대 시스템도 대단한 성과이다. 일단 900만 인구 가운데 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분이 830만이라고 하고 협동조합 수는 3만 2천개에 이른다.

물론 현실적으로 각각의 지역이 정치사회적,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과 그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격차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 원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대단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원주와 나머지 지역의 격차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우선 금융기반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금융기반을 마련해왔다. 몬드라곤에는 협동조합들을 위한 신탁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1960년대 말 아직 노동자협동조합들이 경영적으로 많은 곤경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호세 마리아 신부는 협동조합들을 위한 협동조합은행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일반은행이 협동조합 조직들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소위 협동조합을 위한 신탁은 오늘날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가 가능하게 된 가장 강력한 실체적 힘이라 할 수 있다. 트렌토 연맹의 경우도 지역사회 전체 금융의 60% 이상을 신탁 조직들이 관리하면서 지역 협동조합들의 성장을 강력하게 지지해내고 있다. 퀘백의 경우는 신탁조직들이 만든 데잘딩 사회투자기금, 노동조합들의 연기금(약 8조원), 지방정부의 투자기금, 민간 NPO 장기투자기금 등이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재 원주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금융기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관련 조직들은 매년 수매자금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공분야나 제조업처럼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좀처럼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강력한 연대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동조합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에 있어 연맹(MCC)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연맹은 각 조직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금융분야 등 개별 협동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지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행정분야 그리고 회원조직의 위기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트렌토 연맹의 역할도 이와 유사하며 각 회원조합들은 매출의 3%를 연맹에 지불하여 연맹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연맹의 활동은 그 이상의 매출 증대로 회원조직에게 돌아가고 있다. 퀘백의 경우도 소지역별, 광역별 그리고 업종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로서 상티에 같은 조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위 지역들에 비하면 대단히 느슨한 연대체에 머물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이 성장하려면 조직 내부의 건강성 외에도 제도적 환경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망들이 협동조합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적인 차원에서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는 뿌리내리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 세 지역처럼 현재의 네트워

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는 각 조직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여 경영적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 교육, 컨설팅, 상호부조, 물류교류, 거버넌스 등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원주지역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각 회원단체들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극단적인 이윤추구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오직 지역 차원의 강력한 연대체를 이룬 협동조합들만이 경영적 성공과 자신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민주경영에 기초한 강력한 협동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세 지역의 협동조합들은 노동자와 이용자, 지역사회 내의 지지자, 기관출자자, 협동조합 연구자 모두에게 점차로 경영을 개방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0년대 레이드로 박사가 말하였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협동조합들, 협동조합운동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그러한 협동조합의 전형들을 실현해온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에게 조합원 자격과 이사회 참여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로 인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협동경영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되었는데 신빈곤 시대에 이러한 실천은 지역사회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자들은 모두 조합원들의 가족이기에 그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된 것은 당연히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오늘날 영리기업들을 압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몬드라곤이나 트렌토 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1대6 또는 1대3의 임금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몬드라곤의 경우 최고경영자와 최저임금 수령자의 임금격차를 평균 1대 6 정도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트렌토는 1대 3의 원칙을 지난 백년간 고수해왔다. 이들은 재벌은 없지만 모두가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원주지역은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함께 하는 협동경영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제 협동조합 조직을 통해 진행되어 온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계는 1970년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안의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다. 원주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대에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협동조합이 어떠한 노동을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라졌다.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될 것이다. 그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뿌리인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인 협동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대단히 강

력한 경영조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리기업들조차 협동조합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경영혁신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주식회사들은 이사회 30% 범위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거부하고 자율경영체계를 도입하였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협동조합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버리고 이미 영리기업들조차도 벗어버린 옷들을 주워 입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만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실현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자존감있는 노동을 창조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취업시키고 싶은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경영원리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연구와 작업들이 이 시간부터 실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치환경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탈리아 트렌토의 협동조합운동과 퀘벡 사회적경제 운동이 지금처럼 풍성해진 이면에는 삶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시민들에 의해 자유롭게 설립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방정부를 견인해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와의 죽음의 키스라는 소위 정부지원에 의해 종속되는 길을 피하고 협동조합운동의 역량을 연대체를 통해 강화시켜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정부를 새롭게 견인해내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사회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는 관계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원주지역에서도 여러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상법상 회사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직까지 설립자들의 정신에 의해 협동조합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사유화되고 협동조합적 성격이 퇴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운동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원주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운동의 오랜 역사적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구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지방정부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내는 노력을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최

종적 목표는 시민들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 보다 넓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우리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변환경을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에 대신하여 몬드라곤, 트렌토, 퀘백의 사회적경제 운동과 비교하여 본 원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원주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식도 제시해보았다. 실제로 현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어떻게 금융기반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힘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고민들이 토론되고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미래는 아마도 이러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과정들이 공유되고 토론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동의 방식도 변화하겠지만 아마도 원주협동조합운동이 지켜온 가장 근원적 가치와 전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장일순 선생님이 말씀하였던 개문유하(開門流下) 즉 문을 활짝 열고 아래로 흐른다는 그 정신이다.

<참고문헌>

- 김영주 2009년, 무위당 좁쌀 만인계 창간준비 3호
- 2011년, 원주사회적경제블록화사업 심포지움 자료집
- 김익록 2010년,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시골생활 출판사
- 나카타니 이와오 2009년,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기파랑 출판사
- 함께 일하는 재단 2008, 2009 해외연수 보고서, 함께 일하는 재단 출판

CDI세미나 2011-29

제5차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사례 연구

■ 발행자 : 박 진 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

■ 인쇄일 : 2011. 6. 8

■ 인 쇄 : 예로니모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